

“북한군 개입설 두둔한 박선영 위원장 파면하라”

SOCIETY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국회의원 8명·광주시·오월단체 등 잇따라 비판 성명 박 진실화해위원장 “진실 여부 몰라” 국회 답변 발단

‘5·18 북한군 개입설’을 두고 “모른다”고 답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광주지역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왜곡이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하고 진실규명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라는 진화위의 책무와 어울리지 않다고 지적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양부남·민형배·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은 지난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박선영 위원장은 광주시민과 국민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질문에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진실 여부는 잘 모른다”고 수차례 답변했다.

이들은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진화위원장이 5·18운동과 관련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중대한 역사 왜곡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관련 특별법에 5·18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박 위원장의 발언은 실정법 위반의 여지를 남기는 심각한 경계선에 있으며 5·18을 직접 경험한 광주시민에게 큰 상처이자 모욕이다”고 전했다.

2019년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내의 자료와 탈북자 증언, 군·정

보기관 문서, 북한과 미국 정부 문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임을 규명한 바 있다.

5·18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했던 지만원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가 북한 특수군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가 지난 2023년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광주시도 입장문을 통해 “박 위원장은 5·18의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시는 “‘5·18북한군 개입설’은 대법원 판결과 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 결과 전두환·지만원 등에 의해 완전 날조된 거짓말이란 사실이 입증됐다”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진화위원장이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호도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5·18 왜곡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진화위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지 말라”며 “불의한 국가 폭력에 맞서 결사 항쟁하다 산화한 5·18민주열사는 물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사퇴

하라”고 강조했다.

오월단체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두둔한 박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5·18공법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고위 공직자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왜곡을 목격했다”며 “과거사의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의 위원장이 또다시 퇴행적 발언을 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광동 전임 위원장의 반역사적인 횡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진화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박선영 위원장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은 재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한 적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5·18의 북한 관련성을 주장하며 간접적 연변으로 법적적 요건을 벗어나려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단체는 박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행적이 진화위 설립 정신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은 박정희의 독재, 유신 옹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12·3 내란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봐라. 본때를 보여줘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 봐라’는 글까지 썼다”며 “진화위는 과거 국가 폭력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미래의 동력을 만드는 기관이다.

하지만 박선영 위원장의 인식 수준으로 진화위가 진실규명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에 최선의 활동이 가능할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한편, 진화위는 2005년 항일운동, 해외 동포사, 해방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과거사를 조사하기 위해 처음 구성된 독립기구다. 박 위원장은 작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기 전 마지막 임명장 인사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45 달출 05:37
예보 19:16 달진 20:03



광주	☀️	12~22
목포	☀️	12~18
여수	☀️	13~22
순천	☀️	11~24
구례	☀️	10~24
광주	☀️	10~21
임도	☀️	11~23
흑산도	☀️	11~23
고흥	☀️	10~24
진도	☀️	11~18

목포	밀물 (고)	02:19 / 14:28
	썰물 (저)	07:37 / 19:47
여수	밀물 (고)	09:18 / 21:49
	썰물 (저)	03:05 / 15:17

조업일지 부실기재 어선 적발

만년필 ○○전남 신안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채 어업 활동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적발돼.

27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남 신안군 거제도 남서방 51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98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A호는 지난 2월21일부터 4월 24일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고도 총 28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5722kg을 조업일지에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아.

해당 어선은 해경이 중국어선을 집중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들쭉났다.

목포해경은 다음날인 25일 A호의 조업일지를 정정한 뒤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고.

목포=주용준기자ju609911@

광주경찰청 ‘노쇼 사기’ 특별경보 발령

기관 사칭 피해 올해 38건… 서부경찰 집중수사관서 지정

최근 광주지역에서 군부대·교도소·소방본부 등 기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음식점에 포장이나 단체예약 주문을 한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방식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지역 노쇼 피해 사건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38건이 접수됐다.

이 중 이달에만 31건이 발생했고, 지난 주말 사이(11~13일)에만 1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군부대 간부, 교도소 직원,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며 도시락 포장이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증을 보내 주며 전투식량이나 방탄조끼, 응급키트 등의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66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 뒤 잠적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정상적인 납품(유통) 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 명함을 보내는 것은 물론,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마저 위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경찰은 사건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서부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범행수단이 같고 동일수법으로 확인된 사건을 병합해 추적하고 신속한 검거에 나선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공굴리기 경기하는 어린이들 26일 광주 광산구 경안근린공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지구를 옮겨라 공굴리기’ 경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 당락 뒤바뀐 근거 없다”

광주고법, ‘정관변경 안내로 투표권 제한 오해’ 기각 판결

조합 정관변경 안내가 이사장 선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켰어도,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선거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 화정신협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현 이사장 B씨에게 낙선하자 선거권 제한 오해를 일으킨 정관변경 안내 탓에 당락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냈다.

화정신협은 선거일을 약 열흘 앞두고 1차당 출자 금액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 정관변경 후 1차 미만 조합원은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내용도 공고했다.

A씨는 이러한 안내와 공고 탓에 10만원 미만 소액을 출제한 기존 조합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한 것으로 오해해 이사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정관변경 안내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해할 여지가 있

어 보이고 10만원 이상 출자 조합원의 투표율이 소액 출자 조합원보다 1.97% 높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출제한 조합원이 조합 사무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고려했다.

출자 금액 1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한 조합원 간 약 2%의 투표율 차이가 단지 오해 소동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선거 총투표율은 39.6%로, 같은 해 치러진 다른 신협들의 이사장 선거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모른다 가능성에 비합리적인 가정들을 거듭해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맞춤 지원

국토교통부가 ‘12·29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움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

하고, 그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광주지방방호사회는 조사 담당과 함께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